

SICS연구보고서 23-01

성균중국연구소 2023년 양회 분석 특별리포트

2023.03.14.

1. 정치 분야
2. 외교 분야
3. 경제 분야
4. 사회 분야
5. 한반도 및 한중관계 분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목 차

Executive Summary.....	1
2023년 양회 일정.....	2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4
I. 정치 분야.....	6
1. 국가기구 인사: 변화보다는 지속의 의미	
2. 기구개혁의 의도: 미중 경쟁을 위한 포석	
3. 전망: 양회 청사진의 성패는 결국 리창 총리의 손안에	
II. 외교 및 양안정책 분야.....	10
III. 경제 분야.....	12
1. 리창의 데뷔 무대	
2. 거시정책	
3.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4. 민영경제와 개방	
5. 리스크 관리	
IV. 사회 분야.....	15
1. 인구 마이너스 성장 시대: ‘인구 배당금’ 시대에서 ‘인재 배당금’ 시대로의 전환	
2. 취업을 내수 확대의 근간으로	
3. 주택 보장을 강화하여 주거 복지 향상	
V. 한반도 및 한중관계 분야.....	18
1. 한반도 영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2.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견제	
3.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방관	
4. 한국의 기회와 도전	

부록. 국무원 각 부 부장 및 위원회 주임 명단

Executive Summary

1. 정치 분야

- 리커창 행정부의 인적 승계
- 미중경쟁 속 외교라인 부상 : 외교부장 친강의 부각
- 연령제한 규범 형해화 및 완속 세대교체
- 기구개혁 이면에 깔린 미중경쟁을 위한 포석

2. 외교 및 양안정책 분야

- 외교안보 관련 예산 12.2%로 대폭 증가
- 대만 관련, 전체적으로 연성(soft) 기조를 내세움
- 친강의 데뷔무대: 미국에 대한 경고와 비판, 중러관계의 안정성 등 언급
- 대만 업무의 2인자 역할을 할 왕후닝을 필두로 왕이 및 쑹타오가 대만문제의 주요 담당자가 될 것

3. 경제 분야

- 중국식 현대화를 향한 노정의 원년인 2023년, 리창 신임 총리의 데뷔
- 경제 전반보다는 민영경제와 개방을 주도하며 좌경적인 시진핑에 대한 균형자(balancer) 역할 예상
-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 ➡ 고효율 재정정책과 유동성 관리
- 신형거국체제를 통한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강조
- 민영경제, 개방을 강조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두가지”, 즉 국유경제/민영경제 병행발전 방침 재확인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 상징되는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는 본격적 금융자유화의 시그널

4. 사회 분야

- 인구 역성장 시대의 개막
- ‘인재 배당금’, 출산대책, 여성 고용차별 방지, 정년 연장 등
- 대학졸업자로 위주 강력한 일자리 안정+고용 확대 정책으로 민간투자 촉진 등 복합 목표 달성
- 부동산 리스크 방지와 ‘입주보장’ 정책을 통한 주거안정, 주거복지 향상 천명

5. 한반도 및 한중관계 분야

- 한반도 직접 언급은 없었으나 미국 및 역내 미국동맹국에 대한 경고성 발언
-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견제 목소리
-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방관
- 우리 기업에게 중국의 반도체 자립자강과 미국의 반도체 발전법 사이의 이중고 돌파가 과제로 남음

2023년 양회 일정

○ 대회 기간 : 2023.03.04.(토) ~ 2023.03.13.(월)

일시	구분	진행상황 및 안건
3/3 (금)	전국정협	• 정협 언론 브리핑
3/4 (토)	전국인대	• 전국인대 언론 브리핑
	전국정협	• 제14기 전국정치협상회의 제1차 회의(이하 전국정협) 개막식 • 전국정협 제1차 전체회의
3/5 (일)	전국인대	•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이하 전국인대) 개막식 • 전국인대 1차 전체회의 -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청취 - ‘<정부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초안,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수정에 관한 결정’ 초안, ‘202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 상황과 202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관한 결의’ 초안, ‘2022년 중앙과 지방 예산 집행 상황과 2023년 중앙과 지방 예산에 관한 결의’ 초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초안,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초안,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초안 심의 - 전국인대 전문위원회 설립 및 인선 표결방법 및 명단 초안 표결
	전국정협	• 소조회의: 정협 상임위 업무보고 등 심의
3/6 (월)	전국인대	• 대표 소조회의 - <정부업무보고>, 소조회의 계획보고 및 초안, 예산보고 및 초안 심의
	전국정협	• 소조회의: <정부업무보고>, 예산 초안 및 <입법법> 수정 초안 등 토론
3/7 (화)	전국인대	• 대표 소조회의: <입법법> 수정 초안 심의 • 친강(秦剛) 외교부장 기자회견 • 전국인대 제2차 전체회의 -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청취
	전국정협	• 전국정협 제2차 전체회의 - <정협 장정 수정안(초안)> 설명 등
3/8 (수)	전국인대	• 대표 소조회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전국인대 1차회의 선거 및 임명 결정안 심의, 감표인(監票人) 추천
	전국정협	• 소조회의: <정협 장정 수정안(초안)> 심의,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등 토론
3/9 (목)	전국인대	• 대표 소조회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심의 • 대표단 전체회의 -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초안 및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인선 관련 예비 논의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인선,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인선(후보자).
	전국정협	• 소조회의: 각종 결의 및 보고안 심의, 감표인(監票人) 등 추천 • 주석단 제2차, 제3차 회의

3/10 (금)	전국인대	• 전국인대 제3차 전체회의 -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에 관한 결정 초안, 제14기 전국인대 1차회의 선거 및 임명 결정방법 초안, 감표인(監票人) 명단 초안 표결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비서장,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선거 • 대표단 전체회의 - 국무원 총리,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및 위원,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인선 예비 논의 -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인선
	전국정협	• 직능별 정협회의 및 소조회의 • 전국정협 제3차 전체회의 - 전국위원회 주석, 부주석, 비서장, 상무위원 선거
3/11 (토)	전국인대	• 전국인대 제4차 전체회의 - 국무원 총리, 중화인민공화국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및 위원 인선 결정 -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선거 • 대표단 전체회의 - 국무원 부총리, 국무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심계장, 비서장 인선 예비 논의 - 전국인대 각 전문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인선
	전국정협	• 제14기 전국정치협상회의 제1차 회의 폐막식
3/12 (일)	전국인대	• 전국인대 제5차 전체회의 - 국무원 부총리, 국무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심계장, 비서장 인선 결정 - 전국인대 각 전문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명단 초안 표결 • 대표 소조회의 - 정부업무보고, 연도계획, 연도예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 최고인민법원 업무 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 보고에 관한 6개 결의 초안 심의
	전국인대	• 전국인대 제6차 전체회의 - ‘<정부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초안,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수정에 관한 결정’ 초안, ‘202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 상황과 202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관한 결의’ 초안, ‘2022년 중앙과 지방 예산 집행 상황과 2023년 중앙과 지방 예산에 관한 결의’ 초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초안,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초안,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초안 표결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연설 -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연설 •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폐막식 - 신임 총리 기자회견

총리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1. 2022년 및 지난 5년 회고

1) 2022년 회고

- 중국 국내총생산(GDP) 3% 증가
- 연간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환급액 2조 4000억 위안(약 452조 8,080억 원) 초과
- 탈빈곤 인구 취업 규모 3,200만 명 초과

2) 지난 5년 회고

- GDP 121조 위안으로 증가, 5년간 연평균 5.2% 증가
- 식량생산량 매년 안정적으로 6,500억kg 이상(1조 3천억 근)
- 전국 도시(城鎮: 도시와 진) 신규 취업자 수 연평균 1,270만 명 이상
- 8년 간의 노력으로 1억 명에 육박하는 농촌 빈곤인구가 탈빈곤 실현

2. 올해 주요 발전 목표

- GDP 성장률 목표치: 5% 안팎(左右)
- 도시 조사 실업률: 5.5% 안팎 / 도시(城鎮) 신규 취업자 수: 약 1,200만 명
- 재정 적자율 목표: 3% /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 3.8조 위안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 3% 안팎
- 식량 생산량 6,500억kg(1조 3천억 근) 이상 유지

3. 올해의 정부 정책 기조

- 재정정책
 - 적극적인 재정확대 및 효율 제고
 - 현재의 '감세 및 행정비용 인하(減稅降費)' 조세정책 기조를 연장 및 최적화
- 통화정책
 - 광의 통화량과 명목 경제(名義經濟, nominal economy)의 일치를 전제로 실물경제 발전 지원
 - 위안화 환율은 '안정'이 기본 목표
- 산업정책
 -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산업사슬 취약지점 보완 등, 발전과 안정을 함께 도모
 -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한 '신형거국체제' 하에, 기술적 난관 돌파에 있어서 정부가 조직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업들이 혁신 주체로 일신하도록 할 것.
 -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일상화 감독·관리 수준 업그레이드 및 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
 - 전통산업 및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스마트화·녹색화 적극 추동

- **경제운용 및 개혁**

- “흔들림 없는 두가지”(兩個毫不動搖)의 대원칙: 국유경제와 민영경제의 병행발전
- 법에 의거해 민영 기업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을 보호하고 민영경제 발전 확대 장려
- 국유자본·국유기업 개혁 심화 통해 국유기업 핵심경쟁력 제고
- 국유기업의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관계를 제대로 설정

- **경제 개방**

- 상징적인 외자 프로젝트의 실행 추진
- CPTPP 등 높은 표준의 경제협력체 가입 추진 가속화

- **고용 및 소비**

- 청년, 특히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취업 촉진을 우선 순위에 둘 것
- 대중상품(벌크스톡) 소비 안정화
- 생활 서비스 소비 회복 추진

- **금융 리스크 방지 및 해소**

- 부동산 우량·선두 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소하고, 자산 부채 상황을 개선
-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방지·해소하고 채무 기한 구조를 최적화

- **농촌 진흥**

- 농촌 특색 산업 발전을 통해 농민의 소득 증대 및 부유해지는 경로 확대

- **녹색 전환**

- 중점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
- 과학적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탄소 피크 및 탄소 제로(雙炭) 추진

- **주택**

- 탄력형·개선형(剛性和改善性) 주택 수요를 지원하고 신시민,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잘 해결
- ※ 탄력형은 거주조건 변화(가족 수 등)에 따라 변화하는 수요를, 개선형은 유주택자의 질적 개선 관련 수요를 지칭.

- **교육**

- 의무교육의 고품질화 및 균형발전, 도농통합 추진

- **의료 및 사회보장**

- 백신 업그레이드와 신약 연구 개발 추진으로 대중의 의약품 수요를 확실히 보장
- 양질의 의료 자원 확장과 하침화, 지역 균형 배치 추진
- ※ 하침 : 도시 개발의 침로를 3선 이하 도시와 향진 지역에 두는 기조
- 양로서비스 보장 강화, 출산지원 정책 시스템 완비

- **홍콩·마카오·타이완(臺灣) 문제**

-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지원
- ‘타이완 독립’에 단호히 반대하고 평화통일 추진,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 촉진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진척 및 추진

I 정치 분야

1. 국가기구 인사: 변화보다는 지속의 의미

- (정치국원 보직 확정) 20차 당대회 이후 임용 대기 중이던 4명의 정치국 위원 인사가 마무리됨. 20대 정치국 위원 가운데 미임용 상태였던 류궈중(劉國中), 리홍중(李鴻忠), 허립펑(何立峰), 장궈칭(張國淸) 등 네 명이 각각 국무원 부총리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 여기에 당 중앙 통일전선부장이 당연직 전국정협 부주석을 맡는 관행에 따라 스타이펑(石泰峰)이 전국정협 부주석을 겸직하게 됨.
- (리커창 행정부의 인적 승계) 국무원 조성 부문(組成部門) 인사에서 대부분 리커창 총리 시기 인사들이 유임됨. 리상푸(李尚福) 국방부장이나 안휘성 서기에서 국무원으로 자리를 옮긴 정산제(鄭栅潔) 정도가 신임 인사였음.
 - 정산제는 유일하게 지방 성급 서기에서 국무원으로 진출해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을 맡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대일로' 주무 부서라는 점에서 정산제의 사면시, 푸젠성의 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경험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리창 총리가 직접 인사 제청을 했다는 점에서 정산제는 우정룽(吳政隆)과 함께 리창이 이끄는 국무원에서 핵심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임.
- (미중경쟁 속 외교라인 부상) 2022년 12월 말 외교부장에 취임한 친강(秦剛)이 73일 만에 다시 국무위원회에 기용되며 외교 담당 국무위원 시대가 계속 이어지게 됨. 양제츠(楊潔篪), 왕이(王毅)로 이어진 시진핑 주석의 외교라인 중시 기조를 감안하면, 친강의 향후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의 승진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음.
 -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의 부활은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15년 만에 이루어졌고 이러한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의 중용은 미·중 관계 변화와 맥을 같이함. 따라서 현재와 같은 미·중 대립과 갈등 구조가 지속되고 시진핑 주석의 집권이 계속되는 한 외교부장의 국무위원 겸임 그리고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음.
- (연령제한 규범 형해화) 국무원 인선에서 나이와 중앙위원 유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음. 이번 국무원 인선에서 부총리와 국무위원은 전면 교체되었음. 하지만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부와 위원회의 수장은 대부분 리커창 총리 시기 임용되었던 인사들이 유임되었음. 예를 들어 류쿤(劉昆) 재정 부장은 1956년생으로 2018년 3월 13기 전국인대에서 재정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5년을 재임했음. 나이와 재임 기간으로 보나 이번에 교체가 예상되었으나 재신임을 받음. 이강(易綱) 역시 1958년생으로 2018년 3월 13기 전국인대에서 중국인민은행 행장에 선임된 후 이번에 다시 연임하게 되었음. 류쿤은 올해 나이 67세이고, 이강은 65세임.
- (완속 세대교체) 국무원 인사에서 '50후'와 '60후'의 공존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대교체는 현저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성급 당위원회에서 '70후'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과는 다소 상이함. 국무원 조성 부문 수장 26명중 '50후'는 리상푸(1958.2), 왕즈강(1957.10), 왕샤오홍(1957.7), 리샤오펑(1959.6), 천이신(1959.9), 류쿤(1956.12), 이강(1958) 등 5명임. 이들의 재임용은 적어도 국무원 차원에서는 나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중앙위원과 국무원 인사기준의 분기) 중앙위원 탈락 여부는 국무원 인사에서 영향을 덜 미침. 20대 중앙위원에서 탈락한 인사도 국무원 인사에서는 재임용되었음. 교통운수부장에 재임명된 리샤오펑(李

小鵬)은 중앙위원 탈락으로 은퇴가 예정되었던 인사였음. 한편, 전국인대 부위원장이나 전국정협 부주석 인사 그리고 각 전문위원회 주임과 부주임 인사를 보더라도 이미 국가기구에서 나이 제한 규정은 사실상 완화되거나 적용 기준이 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번 양회 국가기구 인사는 리커창에서 리창으로 수장이 바뀐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인사 결과로 미루어 보면 정책의 연속성이 변화보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그 변화된 모습은 일부 조정된 기구개혁에서 찾아볼 수 있음.

2. 기구개혁의 의도: 미중 경쟁을 위한 포석

- 이번 양회에서 기구개혁이 논의된 것은 외부 변수 즉, 미·중 경쟁이라는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중국 지도부의 현실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이미 설정해 놓은 사회주의현대화 강국 건설의 시나리오 완성을 위해서도 중국의 내재적 역량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특히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대체할 수 없는 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국가안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안정 속에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일부 국가기구에 대한 직능 조정 등 변화를 시작했음. 13개의 기구개혁 내용을 범주화하면 크게 ▲과학기술 ▲금융 ▲국가안전 등 세 가지로 묶어낼 수 있음.
-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에서 제시한 개혁 내용은 △과학기술부 재조직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설립 △지방금융감독관리체제개혁 심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국무원 직속 기구로 조정 △중국 인민은행 분행 지행 기구개혁 총괄 추진 △국유금융자본관리체제 완비 △금융관리 부문 종사자 통일 규범관리 강화 △국가데이터국 신설 △농업농촌부 직책 최적화 △노령업무체제 완비 △지적재산권관리체제 완비 △국가신방국(國家信訪局)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조정 △중앙국가기관 인원 편제 줄이기 등 열세 가지임.
- 첫째, 과학기술 차원에서 ▲건전한 신형 거국체제 추진 ▲과학기술 혁신의 전체 체인 관리 최적화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 ▲과학기술과 경제사회발전 상호 결합 촉진 등 과학기술에 관련된 기능(職能)을 강화하고 ▲전략계획 ▲체제개혁 ▲자원 총괄 ▲종합협조 ▲정책 법규 ▲감독 검사 등 과학기술의 거시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음. 과학기술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중복되던 업무는 관련 부서, 예컨대 농촌 과학기술 발전 지도는 농업농촌부로 이관하고, 사회발전계획과 정책 촉진 업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으로 나눠주고, 첨단 신기술 관련 정책 등은 공업정보화부로 이관하고, 외국 과학기술 인력 관련 업무를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로 이관하는 조치를 했음.
- 한편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부는 ▲국가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 ▲국가실험실 건설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국가 기술 이전 체계 건설 ▲과학기술 성과 이전 전환과 산학연(產學研) 결합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 건설 ▲과학기술 감독 평가 체계 건설 ▲과학연구 신용(誠信) 건설 ▲국가 과학기술 협력 ▲과학기술 인재 대오 건설 ▲국가 과학기술 심사 표창 등 열한 가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시했음. 국가데이터국을 설립하는 것 역시 디지털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따른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음.
- 둘째, 이번 기구개혁에서 금융 업무를 혁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보였음. 예를 들어 국가금융감독

관리총국을 설립한다든지, 지방 금융감독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한다든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국무원 직속 기구로 조정한다든지, 국유 금융자본 관리체제를 완비한다든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지점 기구를 개혁한다든지, 금융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규범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금융 관련 기구 조정 및 업무 전환을 추진했음.

- 가령 기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경험을 토대로 국가금융관리총국을 신설하고 국무원 직속 기구로 편제한 것은 수익 사업을 중시하던 사업 단위의 속성을 없애고 금융 서비스 차원에서 금융을 감독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금융 개방의 파고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금융 관련 경쟁에서 제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최소한 외부의 금융 공세에 밀리지 않는 내부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고 완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음. 이른바 선진 금융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중국으로서 금융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음.
- 셋째. 이번 기구개혁에서 드러난 특징으로 국가안전의 문제를 중국이 다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임. 경제를 안보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특히, 식량을 국가안전 차원에서 인식하고 접근하기 시작했음. 국가향촌진흥국을 유지하지 않고 대신에 농업농촌부의 직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식량 안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음. 그리고 사회안정 역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노령업무체제에 대한 완비,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시를 위한 지적재산관 관리체제 완비, 국가신방국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조정하기로 했음. 이러한 움직임 역시 사회안정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안보 차원의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식량과 사회 안전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중국의 기구개혁에서 나타난 국가안전 중시 시각은 대외적으로 상당히 경직되거나 도전적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아울러 중국 내부적으로 한결 보수화하는 사회 변화를 예견할 수 있음. 왜냐하면 국무원 기구개혁은 결국 미·중 간 대립과 갈등에 따른 중국의 내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설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임. 이는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를 자아내게 함.

3. 전망: 양회 청사진의 성패는 결국 리창 총리의 손안에

- 양회에서 나타난 인사와 기구개혁을 보면 결국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됨과 동시에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로 집중됨. 그 중심에 리창 신임 총리가 있음. 인사에서 나타난 흐름을 보면 특히 국무원 조성 부문 인사에서 리커창 총리와 함께 근무했던 대다수 기존 책임자(부장과 주임)들이 유임되었으며, 여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금융, 국가안전에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음. 이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바로 리창 총리의 손에 달려있음. 시진핑 주석은 그대로인데 총리는 바뀌었고, 본인이 책임자의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임.
- 리창 총리는 저장성, 장쑤성, 상하이 등 이른바 연해 발전 지역에서 주로 재직했음. 그렇기 때문에 리창 총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시장주의자라는 것으로 모아짐. 그러나 과연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헤지모니 안에서 자율적으로 시장주의자의 역할을 펼쳐 보일지가 향후 체제 안정의 관건이 될 것임. 순응하게 되면 변화는 없을 것이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게 되면 갈등이 드러내기 때문임. 따라서 정치적 지혜가 필요한 시기임.

- 리창 총리의 기존 발언을 갈무리해보면 대체로 ▲사람 ▲기업가 ▲민영경제 ▲경제발전의 경로(실물 경제와 제조업의 근본을 지키면서) ▲부민(富民) 등을 강조해왔음. 그러나 이는 총리 임명 전에 있었던 현장(저장성, 장쑤성, 상하이시)의 책임자로서 외쳤던 목소리일 뿐임. 이제 리창은 거대 중국의 총리가 되었으며, “기업가가 지역 발전의 기둥이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집단이며, 그들이 바로 미래”라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국정 현장에서 펼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됨. 그리고 이는 이번 양회의 가장 큰 변화임.

II 외교 및 양안정책 분야

-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힌 외교안보 분야 주요 원칙) 외교 및 국방 분야는 국무원의 주요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음. 다만 당이 기존에 설정한 방향에 맞춰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확고히 지키며 평화 공존 5원칙에 기초하여 각국과 우호협력을 발전시키고 호혜상생의 개방 전략을 견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함.
- (외교안보 관련 예산) 양회에서 발표한 2023년 예산 중 ‘안전(safety)’ 혹은 ‘안보(security)’와 관련된 예산은 대폭 증가함. 그 중 사회 안정 관련 예산인 ‘공공 안전 예산’은 6.4% 증가했고, 외교 관련 예산은 12.2% 증가했으며, 국방 예산은 7.2% 증가함. 국방 예산의 증가는 ‘전략 지원 부대’에 대한 예산 투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주목할 점은 식량과 에너지 안보 비축량을 포함한 ‘식량 및 석유 등 물자 비축 예산’이 13.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이는 미래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
- (대만, 홍콩, 마카오 문제) 대만, 홍콩, 마카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홍콩을 홍콩인으로 하여금 통치(港人治港)’, ‘마카오를 마카오인으로 하여금 통치(澳人治澳)’하는 등 고도자치의 방침을 관철하되 ‘애국자가 홍콩과 마카오를 통치(愛國者治港, 愛國者治澳)’하는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함.
- 대만 관련 업무는 국무원의 주요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전국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작년 20차 당대회 <정치 보고>의 연속선상에 서 있으면서도 대체적으로 연성(soft) 정책을 내세움. ‘신시대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당의 총체방략’,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컨센서스’, ‘독립의 반대와 통일의 촉진’,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 추진’ 등을 언급하면서 양안 간 경제문화 교류 및 협력을 강조함. 특히 20차 당대회에서 사용한 “무력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언급하지 않음.
- (친강 외교부장의 발언) 외교 업무 방향은 대체적으로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번 양회는 신임 외교부장 친강(秦剛)의 데뷔 무대였음. 친강은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언급함.
 - ① 미중관계와 관련하여 친강은 “미국이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폭주한다면 아무리 많은 가드 레일이 있어도 탈선과 전복을 막을 수 없고 충돌의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거나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포지셔닝에 심각한 편차가 생겨 중국을 최대 라이벌이자 최대 지정학적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이성적이고 건강한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언급함. 또한 “늑대가 기습하면 중국의 외교관들은 늑대와 함께 춤을 추면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미중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여러 비유를 사용함. 그리고 미국이 말하는 ‘경쟁’이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제로섬 게임이며 양국 국민의 근본이익 및 인류의 미래 운명을 두고 도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 ② 중러 관계 관련해서는 “비동맹, 비대항,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토대 위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제3자의 방해나 도전도 받지 않을 것”이며 “세계가 불안할수록 중러관계는 안정적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조함.
 - ③ 양안관계 관련해서는 대만 문제가 양안(중국과 대만)의 관계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환태평양 양

안(미국과 중국)의 문제라고 강조함. 친강은 11월 중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며,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 중의 토대이자, 중미 관계가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언급된 것을 상기시킴.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내세워 “대만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중미 관계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시진핑의 관련 발언)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도 외교와 국방 문제에 대해 두 차례 발언했음. 첫 번째는 정치협상회의 합동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미국을 직접 지목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억제, 포위, 압박을 통해 중국의 발전에 전례없는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해방군과 무장경찰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통합된 국가전략체계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체화에 힘쓰는 것이 핵심이며 이로써 국가전략능력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음.
- (대만 문제 관련 인사 배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공작영도소조의 인사 배치는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에 임명된 왕후닝(王滬寧), 대만사업영도소조 비서장에 임명된 왕이(王毅),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주임에 임명된 쑹타오(宋濤)가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인사 배치는 대만과의 교류, 협상, 통일전선전술에 초점을 맞춘 것임.
- ① 왕후닝: 대만 업무 분야의 2인자 역할을 할 것이며 정협 주석에 임명되기 전에 이미 대만 업무를 처리하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냄. 민주당파 모임에 참석하고 대만의 국민당 부주석 샤리옌(夏立言)이 이끄는 방문단을 접견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양안 교류의 정상화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발언했음. 또한 전국인대 대만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잡겠다”는 등의 발언을 함. 왕후닝은 앞으로 ‘민주적 협상’, ‘신시대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당의 총체방략’을 구체화하고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 새로운 담론을 제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② 왕이: 현재 외사위원회 판공실 주임을 맡고 있음. 과거에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임을 맡았기 때문에 대만 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음. 외교부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정세의 맥락 속에서 대만 문제를 다룰 것임을 시사. 주요 역할로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 반대, 하나의 중국 원칙의 국제적 추진, 대만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의 방지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임.
- ③ 쑹타오: 중앙 대외연락부장 역임 후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임에 임명됨. 시진핑과의 관계가 깊고 왕후닝과도 업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 바 있음. 이러한 인사 배치는 중국공산당 중앙이 대만 업무에 있어서 정책 결정에서 집행까지의 일체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냄. 대만 국민당 샤리옌(夏立言) 부주석과의 회담에서 양안 교류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했음.

Ⅲ 경제 분야

1. 리창의 데뷔 무대

- 2023년은 중국식 현대화를 향한 노정의 원년으로, 양회에서 제시된 목표들은 비단 한해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안배도 내포하고 있음.
-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천명된 향후 수십년의 국가 청사진 '중국식 현대화'는 공산당이 전 중국을 이끌고 단결시켜 성취해야 할 지상목표이며, 경제 분야에서 '중국식 현대화'의 핵심 요소는 신발전이념과 신발전구도임.
 - 신발전이념: '안정 속 발전', '경제의 뉴노멀(新常态, new normal)', 양적발전의 질적발전으로의 전화 등을 포괄하는 중국식 발전주의.
 - 신발전구도: 고부가가치화 및 개방을 골자로 한 쌍순환(국내대순환+국제대순환) 체제의 구축을 의미.
- 단, 중장기 경제운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은 이미 지난 연말에 제시했고* 이번 양회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던바, 2023년 양회의 초점은 리창 신임 총리의 데뷔에 맞춰질 필요가 있음.
 - ※ 연말 <내수확대전략규획강요(2022 - 2035년)> 및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확대, ▲적극적 재정정책, ▲안정적 통화정책, ▲개방, ▲과학기술 자립자강, ▲고용 최우선 등을 제시.
- 시진핑 3기 집권에 따라 국무원 총리직의 위상이 전대의 총리들이 지녔던 '러닝메이트'적 지위에 비하면 행정 대리인적 성격에 가까워진 상황 속에서, 리창이 저장성, 상하이에서 외국인 투자와 민영경제 활성화 면에서 업적을 쌓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리창의 주요 임무는 경제 전반에 대한 조정과 지휘보다는 민영경제와 개방을 주도하는 데 있고, 나아가 시진핑이 주도할 좌경적 경제개혁(e.g. 공동부유, 균형발전, 재분배)으로 인한 민영기업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균형자(balancer)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 환언하면, 시진핑은 기존의 공동부유, 향촌진흥, 균형발전, 도농통합 등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자신이 그 아이콘이 되고자 할 것임. 이는 시진핑 권력 공고화의 핵심전략 중 하나임.
- 이미 리창 총리는 양회 폐막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거시정책, 내수 확대, 개혁 및 혁신, 리스크 관리라는 네 가지 정책 수단을 조합한 콤비네이션 펀치(組合拳)를 사용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이 프레임은 2023년도 중국 경제를 보는 창(窓)이 될 것임.

2. 거시정책

- (경제성장률) GDP 성장 목표는 5% 안팎으로 제시됨. 지난 해 코로나 봉쇄 충격으로 인한 데미지와 그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5%는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이며, 특히 5% '안팎'은 4% 대의 성장률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성장률 수치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해석 가능.
 - 데뷔하는 리창 총리가 경제성장률 수치에 얽매이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 존재.
- (재정·통화)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적극적 재정·안정적 통화의 기조를 천명.
 - 재정 적자율 목표 3%(전년 대비 0.2% 상승)
 - 통화정책의 기본은 광의 통화량(M2)과 명목경제(名義經濟, 명목 GDP와 상통)의 일치로, 금융경제를 실물경제 발전에 연동시키겠다는 의도와 함께 그 이상의 유동성은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의지 표명.

- 류쿤 재정부장은 3월 1일 회견에서 “재정지출 최적화를 통해 ‘사랑발천근’의 묘를 다하겠다”고 천명.
※ 사랑발천근(四兩撥千斤) : 4량(200g)으로 천근(500kg) 무게를 다스린다는 중국 무술의 개념원리.
-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량은 3.8조 위안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20~’22)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표 1 참조). 이는 지방정부 리스크의 확대로 볼 수도 있고 중앙정부의 부양의지로 볼 수도 있음. 특히 코로나 방역 비용의 지방정부 전가 등으로 인한 지방정부 채무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짐.
 - 2022년 지방정부 토지양도금이 4.13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27.3% 하락한 여파도 영향.
 - 단, 중앙의 지방정부 이전지출이 10조 위안으로 편성되어 역대 최고를 갱신하는 등 지방정부 발 채무위기에 대응할 ‘실탄’을 마련.

표 1. 중국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 규모 추이(양회 발표 기준)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규모 (조 위안)	1.35	2.15	3.75	3.65	3.65	3.8

- 청년취업을 강조하며, 특히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취업 촉진을 우선순위로 둬. 20차 당대회에서 천명된 “과학과 교육으로 국가를 진흥” 발전전략의 핵심이 고급 인재 육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의 해외유출, 고학력자 취업난 등의 문제가 따르고 있는 현실을 반영.

3.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 미국의 대중 견제가 반도체 등 핵심 첨단기술 영역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악조건 속에서 산업 고부가가치화,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산업사슬 취약지점 보완 등, 발전과 안정을 함께 도모하고 있음.
-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으로, 이를 위해 ‘신형거국체제’를 가동할 것을 천명함. 미국에 의해 고단 반도체 기술에 봉쇄당한 상황에서 국가가 전 인민을 일치단결시켜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설립: 신형거국체제 추진의 핵심 부서.
 - 국가(state)의 경제 총지휘를 가능케 하는 명목 → 일각에서 ‘국가자본주의’로 해석.
- 공동부유 정책의 여파로 위축되었던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지원을 언급. 이는 중장기적으로 4차 산업 혁신의 동력 감소를 경계하고 미국과의 차세대 기술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체제를 갖 추고자 하는 의도이며, 향후 과학과 기술이 명시된 모든 영역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

4. 민영경제와 개방

- 리커창 전임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업가 권익 보호를 수차례 강조한 데 이어, 리창 신임 총리 역시 취임 기자회견에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민영기업가들이 창업의 찬란한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단, 국유기업의 개혁 심화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조가 지속되고, “국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잘 설정해야 한다”는 언명이 나온 것은 국유부문의 강화정책 또한 지속될 것임을 의미함.
 - “흔들림 없는 두가지”(兩個毫不動搖) 대원칙, 즉 국유경제와 민영경제의 병행발전 의지 재확인.
- 중국 배제 전략의 일환으로 출발한 CPTPP에의 가입 시도를 공식화. 이는 현재 신보호주의, 일국주

의로 회귀한 미국이 그간 국제경제질서에서 영위해 온 '자유와 개방의 수호자' 위상을 공락함과 동시에, CPTPP 참여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에게 "중국 없이 얼마나 유의미한 경제협력이 되겠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임.

- 트럼프 집권 이후 중국은 국제경제에서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해 왔으며 최근 미국의 IRA, 반도체 지원법 등 보호주의 정책기조들과 더욱 대비되고 있음.

○ FDI 투자유치환경 개선과 자유무역시험구의 더욱 과감한 운용을 선언함.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업 규제완화 및 외국인 투자자 내국민 대우의 철저한 이행을 공언.

※ 지난 5년간 제조업 영역의 FDI 규제는 기본적으로 폐지되었고, 금융업 FDI 역시 대폭 완화된 바 있음.

5. 리스크 관리

○ 2023년 양회 금융정책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하 금감총국)의 설립임. 이는 기존 금융 감독을 담당하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를 폐지 후 신설한 기구로, 은보감회에 비해 행정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은행 관리감독 역할을 부여함.

- 단, 증권업에 대해서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위)의 관할로 했으며, 이와 함께 증감위를 국무원 직속기구로 조정하며 권한 강화 및 기업채권 발행 감독 업무 담당. 이는 20차 당대회 이후 기업의 직접 금융 활성화(탈규제)를 강조해 온 데 대한 관리 조치(재규제)로 볼 수 있음.

○ 금감총국은 기존 인민은행 하부의 은보감회와 달리 국무원 직속 기구로 편제됨으로써 과거 수익사업도 겸하던 속성을 없애고 공공성을 크게 제고함. 이는 곧 국가가 금융을 철저히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의미임.

○ 후발국가 금융 자유화의 성공은 탈규제(deregulation)와 재규제(reregulation)가 동반되어야 함. 중국은 근 수년간 <외상투자법> 제정 및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정책을 실시하는 등 개방을 위한 탈규제와 함께 여러 재규제 정책을 채택해 왔음.

➡ 따라서 금감총국은 금융자유화의 위축이 아니라 본격적 개방의 시그널로 볼 수 있음.

○ 부동산 우량 선두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 및 해소하고, 자산 부채 상황을 개선하자는 점을 밝힘. 이는 현재 대형 부동산 기업의 리스크가 여전히 시스템 차원에 내재해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

IV 사회 분야

- 예년과 달리 올해 양회에서는 “경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 아래 사회 분야의 중점 이슈에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남. 우선 “민생과 내수 확대의 결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국 재정 지출의 70% 이상이 민생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제기됨. 둘째, 정책의 초점이 기존의 노후 보장, 사회보장, 의료에서 인구, 취업, 주택 등 국가의 중장기 발전 및 거시경제 구조와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분야로 옮겨짐.

1. 인구 마이너스 성장 시대

: ‘인구 배당금’ 시대에서 ‘인재 배당금’ 시대로의 전환

- 인구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양회의 주요 이슈였음. 다만 그동안 인구 문제의 주요 이슈가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와 둘째·셋째 자녀 출산 장려 및 관련 정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 인구 문제의 이슈는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 급속한 노동인구 감소, 인재 배당금의 발굴 방안 등으로 옮겨짐.
- 중국은 지난해 61년만에 처음으로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중국의 인구는 작년 기준 14억 1,175만 명으로 2021년(14억 1,260만 명)에 비해 85만 명 감소함. 연간 출생아 수도도 7년 동안 46% 감소했고, 16-59세 노동인구는 지난 10년간 6,500여만 명이 감소했음. 노동 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을 둔화의 주요 영향요인이기 때문에, 중국 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경제성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양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 논의가 이뤄짐.
 - 1) 중국 정부는 앞으로 농업 현대화와 신형 도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인구 총량은 감소했지만 중국에는 여전히 8억 8천만 명의 노동인구가 있음.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 잉여노동력이어서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비농업 분야로 이전하여 중국 노동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개선하려고 함.
 - 2)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임. 현재 중국의 노동연령은 남성은 16~60세, 여성은 16~55세임. 수명 연장과 노후 부담 가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25년부터 정년 연장을 전면 시행하고 2055년에는 남녀 65세 정년을 달성하겠다고 밝힘.
 - 3) 교육진흥 정책으로 ‘인재 배당금’을 적극 발굴하는 정책 추진. 중국 경제는 이미 중저속 성장 단계에 진입했음. 이제는 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전통적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존하기보다 더 높은 생산 효율에 추구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 양회(兩會)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신규 노동력 평균 교육 연수는 13.8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 성장 공간이 많이 남아 있음. 노동력의 교육 수준을 높여야 중국이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음. 또한 중국 정부는 노동력 공급과 산업 구조 전환의 정합성과 탄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자 함. 직업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갈 것임을 피력함.
 - 4) 저출산이 인구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청년의 출산 의지를 어떻게 높이느냐가 여전히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낮추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 외에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 방지, 여성 경력발전 기회 보장 등에 대한 정책 지원도 올해 양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됨.

2. 취업을 내수 확대의 근간으로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국내 수요 확대에 주력하고 소비 회복 및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내수 확대를 위해 소득 성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으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취업은 미래 소득과 생활 보장에 대한 안정적인 기대와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주 요인임.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함.
- 취업 정책에 있어서 올해 “도시 신규 고용 1,200여만 명 증가와 도시조사 실업률의 5.5% 유지”를 목표로 삼음. 주목할만한 점은 “청년, 특히 대학 졸업자의 취업 촉진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코로나19 발생 이후 16~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23년 1월 이 연령대의 청년실업률은 17.3%에 달함.
- 올해 대학졸업자의 규모가 1,158만 명에 달했는데, 이들이 대부분 신성장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25~59세 인구층보다 청년들의 취업 압박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취업 보장과 관련하여 올해에는 다음의 몇 가지 정책에 더욱 치중할 것으로 예상됨.
 - 1) 일자리 안정과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임. 중국은 지난해부터 3D 업종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실업보험 고용안정 환급률 인상 ▲직업 훈련 등의 고용안정 지원 확대 ▲담보대출·임대료 감면 등 창업지원책 시행 ▲중점사업 건설에서 일자리로 구제를 대신하는 정책의 추진 등을 실시.
 - 2) 민간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신뢰감을 높임. 중국의 민영기업은 80%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민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실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음.
 - 3) 양회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청년 취업난에 대응해 비과세, 보조금 등의 방식을 통해 디지털 경제, 인터넷 생중계 등 대학졸업자에 적합한 신산업 지원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청년층의 자율 창업과 취업 유연성을 장려하겠다고 밝힘. 이 밖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졸업자에 대한 2022년 국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원금 상환 유예 허용 등의 정책도 제시함.

3. 주택 보장을 강화하여 주거 복지 향상

- 이번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는 “주택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주택 수요 지원을 위해 확고하고 개선된 정책을 추진하며, 신규 시민 및 청년층 등의 주택문제를 해결한다. 주요 우량 부동산 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고 자산 부채 상황을 개선하여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부동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는 입장이 담겨 있음. 이 입장은 2023년 중국 부동산 정책의 기초를 요약한 것. 올해 부동산 정책의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음.
 - 1) 부동산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리스크 방지”를 꼽은 것은 올해가 처음. 2022년에 중국 부동산 업계가 깊은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기업의 부채 위험이 크게 증가함. 미완성 건축, 일감 중단 및 대출 중단 러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대중의 광범위한 불만과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사회 안정의 잠재적 위험.
 - 2) 양회에서 “리스크 방지”가 강조된 것은 ‘입주 보장(保交樓)’ 관련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 것임. 정부 업무보고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택 구매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로 리스크를 해결하는 중요한 작업임.

- 또 다른 변화는 올해 정부 업무의 중점 내용 중에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점. 부동산에 대한 투기 과열은 이미 중국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음. 이는 지난해 양회에서 분양시장이 주택 구입자들의 적정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올해 양회에서는 주택보장체계 강화, 확고하고 개선된 주택수요 지원에 역점을 둘 것임을 암시함.
- 마지막으로 민생의 관점에서 주택보장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것은 정부가 더 큰 보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양회에서는 ▲보장성 주택(상품성 주택과 달리 소득 수준이 낮아 주택난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주택) 부지 지원책 개선 ▲보장성 주택 건설에 대한 대출 할인 등 보조금 지급 ▲보장성 주택 건설에 대한 여신지원 확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장성 주택 자활주체에 대한 시장화 방식으로 장기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개인 세입자에게 장기 월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제안되었음. 이는 향후 중국의 주택 시장의 추세를 시사.

V 한반도 및 한중관계 분야

1. 한반도 영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2023년 양회 기간, 친강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관련 언급은 없었음. 하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지목과 공세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역내 동맹국에게도 경고성 발언의 성격을 띠.
-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장기화와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기조는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2.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견제

-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예정 등 한일 공조 강화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냄.
-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강제징용과 노예 노동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음. 관영매체들도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해법 발표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고 비판했음. 이어 8일 외교부는 한국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대해서도 국가 협력은 평화발전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하며 쿼드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으로 지칭한 뒤,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했음.
- 만일 오는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일 3자 협의체 구상이나 쿼드 참여 논의가 본격화 된다면, 한중 관계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3.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방관

- 중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대화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해옴. 지난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군사행동을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지만 중국은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해왔음.
- 특히 이번 양회 기간 3월 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해서도 중국 외교부는 각 측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함께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했음. 최근 관련 당사국이 이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임. 이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 도발을 두둔함과 동시에 대미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추가 군사 도발이 예견되는 가운데, 미중 간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불안정성이 고조될 수 있음.

4. 한국의 기회와 도전

-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강조하며 미중 경쟁 장기화의 포석을 깔았음. 양회 회의에서는 빅테크 기업 수장들 대신 반도체, AI, 전기차 경영진이 대거 포함됨. 중국의 과학기술 중시, 반도체 산업의 자급 노력은 경제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놓음.

- 이번 양회에서 반도체 제조사인 비미크로인터내셔널의 덩중한 공동 창업자는 중국의 독자 표준과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를 통해 반도체 자립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우호 세력을 넓히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 보장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세상화 쓰촨성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겸 전국대표는 전인대가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유사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함.
-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관련법 모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이중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우리 기업 관련 사안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외자유치, 국내 수요 확대와 소비 회복 등임. 최근 중국은 리오프닝과 함께 한국 재계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음. 올해 2월 한중국제협력시범지구가 베이징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고, 3월에는 연청경제개발구가 서울에서 투자협력 설명회를 갖고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함.
- 이번 양회에서는 소비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의 필요성도 언급되었음. 2022년 중국 전체 소비 시장이 0.3% 감소한 반면 온라인 소비시장은 4% 증가했다고 알려짐. 특히 <계획 보고>는 '신형 소비 육성'을 제시했는데 향후 온·오프라인 소비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온라인 생활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비 업종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음.
- 지난해 한국은 대중무역에서 수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한국의 대중 수출은 예전만큼 좋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세계 경기 위축이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자립경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 협력도 보완에서 경쟁 관계로 재편되면서 협력의 추세가 약화되고 있음. 양국은 한중 협력에 대한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부록 국무원 각 부 부장 및 위원회 주임 명단

이름	성별	직책	비고
리창(李強)	남	국무원 총리	공산당 중앙 상무위원
딩쉐샹(丁薛祥)	남	국무원 부총리	공산당 중앙 상무위원
허리핑(何立峰)	남	국무원 부총리	
장궈칭(張國清)	남	국무원 부총리	
류궈중(劉國中)	남	국무원 부총리	
선이친(謙貽琴)	여	국무위원	바이족(白族)
우정룽(吳政隆)	남	국무원 비서장, 국무위원(겸임)	
친강(秦剛)	남	외교부장, 국무위원(겸임)	
리상푸(李尚福)	남	국방부장, 국무위원(겸임)	
정산제(鄭栅潔)	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화이진핑(懷進鵬)	남	교육부장	
왕즈강(王志剛)	남	과학기술부장	
진장룽(金壯龍)	남	공업정보화부장	
판웨(潘嶽)	남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왕샤오홍(王小洪)	남	공안부장, 국무위원(겸임)	
천이신(陳一新)	남	국가안전부장	
탕덩제(唐登傑)	남	민정부장	
허룽(賀榮)	여	사법부장	
류쿤(劉昆)	남	재정부장	
왕샤오핑(王曉萍)	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	
왕광화(王廣華)	남	자연자원부장	
황룬추(黃潤秋)	남	생태환경부장	
니홍(倪虹)	남	주택과 도시농촌건설부장	
리샤오핑(李小鵬)	남	교통운수부장	
리궈잉(李國英)	남	수리부장	
탕런젠(唐仁健)	남	농업농촌부장	
왕원타오(王文濤)	남	상무부장	
후허핑(胡和平)	남	문화여유부장	
마샤오웨이(馬曉偉)	남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	
페이진자(裴金佳)	남	퇴역군인사무부장	
왕샹시(王祥喜)	남	응급관리부장	
이강(易綱)	남	중국인민은행장	
허우카이(侯凱)	남	심계서 심계장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SICS)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509호
소장실: 02•740•1650 / 연구교수실: 02•740•1651~4 / 대표전화: 02•740•1654
대표메일: sics@skku.edu / 홈페이지: <http://sics.skku.edu>
Copyright 2013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All rights reserved.